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성인지적 코로나19 회복 전략의 국제 현황과 과제: 더 나은 재건을 위하여

이윤영 한국국제협력단 젠더전문관

1. 들어가며

유례없는 국제적 위기로 인해 전세계가 몸살을 앓았던 2020년을 지나 2021년 올해는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국민의 과반수가 접종을 완료하기도 하면서 팬데믹 이후의 '회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처럼 그대로(Business as usual)' 돌아갈지 또는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기반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나아갈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기점에 서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국제사회가 오랜 시간 노력해 왔던 빈곤퇴치와 성평등 달성에 기여한 성과를 후퇴시키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많은 우려를 남기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급격히 사회적 우선순위가 재배열되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던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가변성은 기존에 당연시되어 왔던 사회적 체제에 대한 변혁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였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 기존에 달성하였던 성과로부터도 후퇴하여 성평등 달성을 위하여 더욱 고단한 길을 가야 하는지, 또는 위기를 사회적 변혁의 기회로 삼아 더욱 포용적이고 성평등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가 판가름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젠더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흐름과 함께 '더 나은 재건'을 위하여 페미니스트 정책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고 성인지적(gender-responsive) 회복 정책을 위하여 어떠한 전략이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코로나19로 인한 젠더 위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봉쇄조치와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빈곤퇴치와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성과를 후퇴시키고 있다. 월드뱅크의 분석에 따르면 1999년 이후로 극빈층 인구는 약 10억명이나 감소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 왔으나 2020년에는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극빈인구가 최소 8,800만에서 9,300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¹⁾ 특히 여성은 취약한 노동과 생계형태로 인해서 더욱 심각한 빈곤의 위협을 겪고 있다. 2020년 전세계 여성의 실업률은 5%로 남성의 실업률인 3.9%보다 높았고 실업을 경험한 여성의 90%가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²⁾ 전세계에서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7억 4천만명의 여성들은 팬데믹 이후 첫 한 달간 소득이 60% 감소하였다.³⁾ 무급 돌봄과 가사노동, 비공식 영역에 집중된 여성의 노동은 사회보장제도망에서 벗어나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현금 지원 등의 대책에 쉽게 소외된다. 전세계의 총 무급 돌봄 노동 중 약 76%를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⁴⁾ 봉쇄조치로 인한 교육 및 육아 시설 폐쇄는 여성의 돌봄 노동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학교와 육아 돌봄 시설 등이 문을 닫아 주양육자인 여성들은 육아를 위해 더욱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했고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아 자발적인 휴직 또는 퇴직을 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이처럼 공적 돌봄 노동 체계의 공백으로 여성들은 높은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경제적 취약성과 더불어 여성의 건강과 생존 역시 다방면으로 위협받고 있다. WHO에 따르면 전세계 보건의료 시설 근무자의 70%는 여성이고⁵⁾ 수많은 여성들이 높은 코로나 감염 위험과 맞서 싸우며 현장에서 최전선 의료인력으로 헌신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문화적 제한으로 인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성별격차가 발생하여 여성들이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없는 곳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 예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비는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남녀 각자 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확진자의 66%가 남성이고 여성은 34%밖에 되지 않는다.⁶⁾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글로벌 헬스 50/50(Global Health 50/50)는, 여성은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여성 의사에게만 진료

1) <https://blogs.worldbank.org/opendata/updated-estimates-impact-covid-19-global-poverty-looking-back-2020-and-outlook-2021> (최종검색: 2021.06.08)

2) ILO, 2021,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21', 23쪽.

3) UN Women, 2020, *From Insights to Action*. 5쪽.

4) ILO, 2018, *Care Work and Care Jobs*. 3쪽

5) <https://www.aa.com.tr/en/europe/women-are-key-frontline-workers-against-virus-who/2164959> (최종검색: 2021.06.12)

6) <https://globalhealth5050.org/the-sex-gender-and-covid-19-project/the-data-tracker/?explore=country&country=Afghanistan#search> (최종검색: 2021.06.12)

를 받을 수 있는 성차별적 문화를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⁷⁾ 또한 봉쇄 조치로 인해 코로나 대응을 포함한 필수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성·재생산 보건서비스와 가족계획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모자건강이나 성·재생산 권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UNFPA의 최근 연구에서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족계획 서비스와 피임기구에 접근하지 못한 여성이 전세계에서 1,200만명이고, 이로 인해 약 140만건의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⁸⁾ 무엇보다도 가정폭력,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등의 피해와 여아의 아동결혼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이 증가하여 코로나19 저변의 또 다른 위기인 쉐도우 팬데믹(Shadow pandemic)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가 기존의 성불평등을 심화하는 동시에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가시화하는 실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증거에 기반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코로나 19 대응은 얼마나 될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UN Women과 UNDP는 ‘코로나19 글로벌 젠더 대응 트래커(COVID-19 Global Gender Response Tracker)’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각 국가의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 팀에 여성의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대응 정책 중 성인지적 경제 및 사회 보장 정책, 돌봄 노동, 젠더기반폭력 등을 다루는 정책이 얼마나 되는지 추적하여 공유하고 전세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최근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코로나19가 야기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40%가 여성 또는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계획되었고 그 중 여성폭력대응을 위한 정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경제 사회적 구조에 관한 부문인 돌봄과 여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 정책은 전체 정책들의 10%도 되지 않았다.⁹⁾ 동시에 이러한 긴급 대응 정책이 장기적인 사회경제 회복 전략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여성을 고려한 정책들을 선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정부라고 하더라도 성평등한 사회 회복을 위한 통합적인 회복 전략이나 예산안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극히 드물다. UNDP의 젠더와 사회규범 인덱스에 따르면 전세계 남성의 50%가 남성의 일자리가 여성의 일자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¹⁰⁾ 정부의 대표와 국회를 포함한 정치적 영역에서 남성이 과대대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은 코로나19 이후의 회복도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인 산업 위주의 경제회생정책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7) <https://www.nytimes.com/2020/10/01/us/afghan-covid-gender-inequality.html> (최종검색: 2021.06.12)

8) UNFPA, 2021, Impact of COVID-19 on Family Planning: What we know one year into the pandemic

9) COVID-19 Global Gender Response Tracker. <https://data.undp.org/gendertacker/> (최종검색: 2021.06.12)

10) UNDP, 2020, 2020 Human Development perspectives: Tackling Social Norms, 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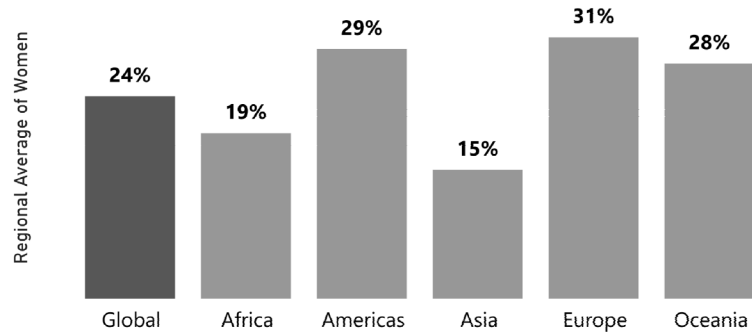
〈표 1〉 지역별 성인지적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수

Number of measures by region

Region	All Measures	Gender Sensitive	Unpaid care	Violence against women	Women's economic security
Africa	539	212	10	117	85
Americas	752	360	42	223	95
Asia	770	281	25	184	72
Europe	908	361	91	242	28
Oceania	143	85	12	66	7
Total	3,112	1,299	180	832	287

출처: COVID-19 Global Gender Response Tracker (2021.06.12.)

Proportion of women on COVID-19 task forces globally and by region



출처: COVID-19 Global Gender Response Tracker (2021.06.12.)

〔그림 1〕 지역별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의 여성참여비율

〔그림 1〕에서와 같이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팀의 여성참여비율 역시 전세계 평균이 24%밖에 되지 않고 비율이 가장 높은 유럽이 31%, 가장 낮은 아시아는 15% 밖에 되지 않았다.¹¹⁾ 이 또한 세부결과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편차가 심각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태스크포스팀에 단 한 명의 여성도 없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11) COVID-19 Global Gender Response Tracker. <https://data.undp.org/gendertacker/> (최종검색: 2021.06.12)

현재 드러난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더 나은 재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과 폭력, 돌봄 등에 대한 위기를 현재 급하게 처리해야 할 발등에 떨어진 불로만 여기지 않고 주류의 사회경제적 회복 정책에 포함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인지적 회복이란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변혁을 추구하는지, 페미니스트 회복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의 사례를 통하여 그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코로나19 이후 페미니스트 회복 전략 사례

가. 아르헨티나: 변혁을 주도하는 페미니스트 정치인들

코로나19 젠더 대응 트래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가장 많은 성인지적 코로나 대응 정책을 제시한 나라 중 하나이다. 코로나 직후 2020년 4월 집행된 긴급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가사노동자와 전업양육자들을 수혜자로 포함시켜 지급하여 돌봄 노동을 중요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정하였다. 그 외 다양한 현금 지급 프로그램에서 가정 내 여성과 산모, 아동이 있는 가정을 우선시하는 성인지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봉쇄조치로 증가하는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여성들에게 6개월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정책과 함께 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필수서비스로 지정하고 호텔들을 추가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통과된 원격근무에 대한 법안은 13세 이하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무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이렇듯 아르헨티나는 경제, 폭력대응, 돌봄 등 코로나 긴급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면의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한 것에 더불어 2021년 처음으로 성인지적 국가예산안을 제안하고 총 국가예산의 약 15%를 성차별 개선에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¹²⁾

이러한 성인지적 회복 전략의 뒤에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이자 현재 아르헨티나 재무부의 경제, 평등, 젠더 부서¹³⁾의 디렉터인 메르세데스 달레산드로(Mercedes D'Alessandro)로 대표되는 아르헨티나 정부 내의 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이 있다. 2019년 당선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은 여성, 젠더, 다양성 부처¹⁴⁾를 창설하고 재무부

12) <https://www.argentina.gob.ar/noticias/mercedes-dalessandro-es-la-primera-vez-que-se-presenta-un-presupuesto-con-perspectiva-de> (최종검색: 2021.06.12)

13) Ministerio de Economía, Economía, Igualdad y Género

내에는 경제, 평등, 젠더 부서를 신설하는 등 여성의제를 고려한 개편을 단행하며 많은 페미니스트, 사회운동가 출신 여성들을 등용하였다. 이후 곧 터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들은 젠더 관점을 반영한 사회경제적 대응책을 제시하며 아르헨티나의 변혁을 이끌고 있다. 여성 운동가를 대변하는 변호활동과 임신중단 합법화 운동을 해오던 엘리자베스 고메즈 알코르타(Elizabeth Gómez Alcorta)는 여성, 젠더, 다양성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되어 젠더기반폭력 대응과 성평등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수석 법률 고문인 빌마 이바라(Vilma Ibarra)는 임신중단에 관한 법안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기반작업을 주도하여 2020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14주 이내 임신중단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역사적 성과를 얻어냈다. 페르난데스 정권은 정부 내 고위관리직 중 37.5%가 여성으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여성 고위 공직자 비율을 달성하였다.¹⁵⁾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바탕으로 250여명이 넘는 여성 공직자들은 “Women in Government”이라는 왓츠앱 채팅방을 만들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지지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⁶⁾



출처: Sarah Pabst / The New York Times

[사진 11] 아르헨티나의 페미니스트 정치인들. 왼쪽부터 달레산드로, 이바라, 알코르타

14) Ministerio de las Mujeres, Géneros y Diversidad

15) <https://www.nytimes.com/2021/05/11/world/feminists-argentina-government.html> (최종검색: 2021.06.12)

16) 위 출처.

이렇듯 아르헨티나의 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은 성평등 의제에 기여하고자 변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장기회복 전략에도 젠더 관점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달레산드로가 이끄는 경제, 평등, 젠더 부서는 최근 연구를 통하여 무급 돌봄 노동과 가사노동이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아르헨티나 총 GDP의 15.9%에 해당하며 이 중 75%가 여성의 기여분이라고 발표했다.¹⁷⁾ 아르헨티나 여성들이 하루에 무급 돌봄과 가사노동에 쏟고 있는 시간은 매일 총 9,600만 시간으로 돌봄노동의 저평가와 여성의 경제적 진출 장애요소를 개선하고자 돌봄노동의 가치를 가시화하며 공적 돌봄 체계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페미니스트 정책은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2020년 9월에는 공공영역 일자리에서 최소 1% 이상의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도록 하는 할당제를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90% 이상이 공식 고용시장에 포함되지 못하고 다수가 성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트랜스젠더 인구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⁸⁾ 아르헨티나는 2012년 제정된 성정체성 법안 이후 의사의 진단이나 판사의 동의 등이 없어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성별정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호르몬치료와 성별재지정수술을 의료보험으로 보장하는 등 가장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나. 캐나다: 다양성과 교차성, 시민사회와 국제협력

2015년 당선 이후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하고 페미니스트 정책을 내놓으며 ‘페미니스트 총리’ 트뤼도로 유명해진 캐나다 역시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성인지적 긴급 지원을 진행해 왔고 포용적인 페미니스트 회복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캐나다의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페미니스트 전략은 정부 정책과 공공부문 등에 한정되지 않고 비영리단체와 연구기관 등 민간부문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으로도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이 눈여겨 볼 만하다.

캐나다의 부총리이자 첫 여성 재무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첫 정부 예산안인 2021년 예산안을 준비하며 전일 여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조직하여 페미니스트적이며 교차적인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극복할 경제회복을 위한 '21년 예산안의 주요 테마는 일자리 창출, 소규모 비즈니스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과 함께 여성에 대한 지원과 돌봄 체계 구축을 포함하

17) <https://www.argentina.gob.ar/noticias/la-direccion-de-economia-igualdad-y-genero-presento-el-informe-los-cuidados-un-sector> (최종검색: 2021.06.12)

18) <https://www.batimes.com.ar/news/argentina/argentina-establishes-1-quota-for-trans-workers-in-civil-service-jobs.phtml> (최종검색: 2021.06.12)

고 있다.¹⁹⁾ 성주류화를 고려한 해당 예산은 중점 분야별로 달성 목표와 예산, 실행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 예로 부모의 보육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300억달러(한화 약 27조 5,565억원), 여성기업가 지원을 위해 향후 4년간 1억 4,690달러(한화 약 1,349억원), 젠더기반폭력 종식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6억달러(한화 약 5,511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 외에도 취약계층 여성 주거지원, 성·재생산 건강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과 여아 진실규명 프로그램 등에 폭넓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²⁰⁾

또한 캐나다 정부는 21년 3월 여성 및 성평등부²¹⁾를 통해 국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1억달러(한화 약 918억원)의 ‘페미니스트 대응과 회복 기금(Feminist Response and Recovery Fund)’ 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²²⁾ 해당 기금은 리더십과 의사결정지위에 있는 여성 및 여아를 장려하고, 여성 폭력 근절, 여성의 경제적 안정성 개선의 세 가지 중점 분야를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이 기금에는 비영리 여성단체, 원주민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지역정부, 연구기관과 교육기관들이 지원할 수 있고 캐나다 정부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하여 포용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소외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캐나다는 원조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에도 젠더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2017년 발표된 캐나다의 ‘페미니스트 국제원조정책(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은 성평등과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를 해당 정책의 핵심 분야로 내세우고 동시에 인간 존엄, 모두를 위한 성장, 환경과 기후행동, 포용적 거버넌스, 평화와 안보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1~2022년까지 95% 이상의 캐나다의 양자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성평등과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관점을 통합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²³⁾ ‘21년 예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원조예산을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페미니스트 국제원조정책과 함께 젠더 관점을 반영한 원조사업을 확대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캐나다는 작년 6월 코로나 위기 속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890만달러(한화 약 81억원)의 재원을 편성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지원하기도 하였다.²⁴⁾

19) <https://www.budget.gc.ca/2021/home-accueil-en.html> (최종검색: 2021.06.12)

20)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1/04/budget-2021-supporting-women.html> (최종검색: 2021.06.12)

21) Ministry of Women and Gender Equality and Rural Economic Development

22) <https://www.canada.ca/en/women-gender-equality/news/2021/02/government-of-canada-to-invest-100-million-to-support-women-impacted-by-the-pandemic.html> (최종검색: 2021.06.12)

23) 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ssues_developpement-enjeux_developpement/priorities-priorites/policy-politique.aspx?lang=eng (최종검색: 2021.06.12)

24) <https://www.ctvnews.ca/politics/feds-commit-8-9m-in-foreign-aid-for-reproductive-health-services-amid-covid-19-1.4976634> (최종검색: 2021.06.12)

캐나다의 페미니스트 정책에서도 역시 그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 짓지 않고 장애인, 성소수자 및 원주민 등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를 고려하는 포용성과 교차성을 핵심 가치로 논의하고 이에 관련된 재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하여 시민사회를 위한 특별 기금을 마련한 것은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시민사회가 가지는 전문성과 다양성에 기반하여 주변화되고 소외된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여성주의적 시민사회 생태계를 장려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4. 페미니스트 회복 전략의 접근방향과 성인지적 데이터

더 나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페미니스트 회복 전략은 국가별 맥락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양하지만 성별격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적 돌봄 노동 체계에 투자하며 여성의 경제적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하며 여성과 다양한 소수자의 참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인지적 회복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낸시 프레이저의 사회적 정의를 위한 3R(Recognition, Representation, Redistribution) 관점인 인정, 대표성과 재분배의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표 2>에 정리해보았다. 중요한 점은 세 분야의 전략들은 각자 별도의 전략이나 정책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관계로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지 않고는 성별격차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불가능하며, 성별격차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없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분배 역시 불가능하다. 또한 포용적인 재분배를 위해서는 여성과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표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증거기반 성인지적 정책의 기본은 성인지적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서 성별격차를 가시화하고 그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근 국제사회는 성별 데이터의 부재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글로벌 헬스 50/50에서는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 등의 성별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 젠더 그리고 코로나19 프로젝트(The Sex, Gender and Covid-19 Project)'²⁵⁾를 통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된 성별분리통계의 현황을 추적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 대응 성인지적 정책 현황을 추적하는 UN Women과 UNDP의 글로벌 젠더 대응 트래커 역시 이러한

25) <https://globalhealth5050.org/the-sex-gender-and-covid-19-project/>

〈표 2〉 낸시 프레이저의 3R의 틀을 통해 분석한 페미니스트 회복을 위한 전략 방안들

주요 분야	페미니스트적 회복을 위한 전략
인정 (Recogn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 데이터와 통계 개선 (성별분리통계) 무급 돌봄 노동과 가사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 인정 성별격차를 인식하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젠더기반폭력의 실태 파악 및 근절 지원
대표성 (Re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정치사회적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공적 영역 참여 확대 리더십과 의사결정권 가진 역할에 참여하는 여성비율 확대 정책 수립과 이행, 평가 과정에 여성 참여 메커니즘 확대 연령, 장애, 인종, 성 정체성 등의 교차성을 고려한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는 메커니즘 마련
재분배 (Redistrib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 대응과 장기 회복 전략 자원의 성평등한 분배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지원 (취업훈련, 여성 기업가 지원 등) 취약계층 여성 대상 긴급 현금 및 일시적 기본소득 제공 비공식 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의 형태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대 공적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자원 확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위한 보건서비스 자원 확보 남성의 돌봄과 가사노동 참여 장려할 수 있는 사회문화와 제도 마련

have reported data on cases and deaths in past month
 have reported either case or death data in past month
 no sex-disaggregated case or death data reported in past month
 not yet tracked



출처: Global health 50/50

〈그림 2〉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관련 성별분리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의 현황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 글로벌헬스 50/50가 파악한 코로나 관련 성별분리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의 현황은 고소득국가와 중저소득 국가의 분포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회복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성인지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세계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도 성별분리통계와 성인지적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재원지원 등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젠더 데이터는 생계형태와 소득, 교육, 보건 등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 지표에 성별분리통계를 통해 성별격차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젠더기반폭력 피해 파악,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침해, 돌봄과 가사노동의 부담 등 가정 내 사적 영역으로 여겨졌던 부분에 대한 질적 지표 등도 포함하여서 포괄적인 성분석을 위한 바탕이 되어야 한다.

5. 나가며: 더 나은 재건을 위해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며 사회 회복과 정상으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이전과 같은’ 사회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위기가 많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남긴 사회경제적 영향을 복구하는 데는 향후 몇 년간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어느 수준의 회복 후에도 이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차별, 빈곤과 폭력의 경험을 보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사회로 복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이 위기의 기회를 빌려 더욱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시장중심의, 남성을 위주로 한 경제 모델에서 돌봄과 재생산을 고려한 대안적 사회적 모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재난이 닥쳐오지 않도록 기후대응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개혁과 전환에 여성과 취약계층의 의견을 포함하여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여성 페미니스트 정치인과 이들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남성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가와 공공부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소외계층과 다양성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종식의 꿈은 아직 북반구의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아직도 폭발적인 코로나 연쇄감염으로 인해 봉쇄조치가 현재진행형인 국가들이 있고 중저소득 국가는 더욱 심각한 빈곤의 위협을 겪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백신보급,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재건을 위한 재원 마련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유엔 경제이사회 역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

적이며 개발국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⁶⁾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협력 재원 역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수원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인지적 역량강화와 여성과 소외계층의 권한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속한 지역사회, 도시, 국가를 넘어선 국제적인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연대를 가꾸어 나가야 우리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6) <https://www.un.org/press/en/2021/ecosoc7046.doc.htm> (최종검색: 2021.06.12)